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9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4. 2. 21. (제 3 차)	

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에 대한
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※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.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4. 2. 21.

1. 의결주문

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'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', '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' 및 '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'이 적발되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지배구조법') 제43조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18백만원 부과

나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

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7.2백만원 부과

다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10백만원 부과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4.1.4.) 심의필
-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(2024.1.24.) 심의필
- 제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4.2.15.) 심의필

<별지>

스톡얼터너티브에셋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과태료 35.2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

-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-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
-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법적근거 :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지배구조법') 제7조 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제3항, 제30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) 제2항, 제43조(과태료) 제2항 제1호의3·제2항 제8호,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25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) 제1항·제2항, 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2] 2.다.·2.조.,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14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) 제1항 제2호·제2항,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」 제2조 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, 제6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),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1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별표 22

2. 조치사유

가.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-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(사임 포함)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 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는 2019.3.4. 및 2021.7.30. 발생한 임원 해임(사임 포함)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2회)

나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

-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(선임·해임)하는 경우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 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는 2019.3.4. 및 2019.6.21. 발생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2회)

다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 -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(주)은 ‘스티크XXXXXX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’(이하, ‘XXXx호’)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는 XXXXX펀드* 발행 집합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70% 초과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음에도, 동 편입조건을 2020.1.24. ~ 2021.6.16. 기간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음

* XXXXXXXXXXXXXXXXXXXX (해외펀드)

관계 법규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①~② (생략)

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) ① (생략)

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(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.

- 1.~4. (생략)
5. 주의

[별표]

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

(제34조 및 제35조 관련)

5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
33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

제43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~1의2. (생략)

1의3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

- 2.~7. (생략)

8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5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) ① 금융회사는 법 제 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

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<div> <div>[별표 2]</div> <div>과태료의 부과기준</div> <div>(제34조 관련)</div> </div>											
<div> <div>1. 일반기준</div> <div> <p>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</p> </div> </div>											
<div> <div>2. 개별기준</div> <div>(단위: 만원)</div> <table> <tr> <th>위반행위</th><th>근거 법조문</th><th>과태료 금액</th></tr> <tr> <td>다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</td><td>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3</td><td>1,800</td></tr> <tr> <td>조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td><td>법 제43조 제2항 제8호</td><td>1,800</td></tr> </table> </div>		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다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3	1,800	조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8호	1,800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
다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3	1,800									
조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8호	1,800									

□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

제3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 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임원을 해임한 경우: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

3.~4.(생략)

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장(이하 "감독원장"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해임한 경우: 성명, 해임 사유,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

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

제14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)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해임한 경우: 성명, 해임 사유,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

□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」

제2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)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,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)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.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21.10.21.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.10.21.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)

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~ ③ (생략)

-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1.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 - 2. ~ 9. (생략)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

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로. 법 제87조제8항(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33호	6,000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 3>

과태료 부과기준

1. 목적 (생략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- 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- 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위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산정한다.
- 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- 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금융투자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848